

전북

4.11 총선을 통해 본 전라북도 민심의 현주소

박동천 |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일당독점 현상의 완화

전라북도에서는 4월 11일 선거에서 국회의원 11명과 도의원 3명, 그리고 군의원 1명이 선출되었다. 지방의원 4석은 무투표 당선자 1석을 포함해 모두 민주통합당에게 돌아갔고, 국회의원으로는 민주통합당 소속 9명에 통합진보당 소속 1명과 무소속 1명이 당선되었다.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11석을 싹쓸이했고, 18대 때는 통합민주당 9석과 무소속 2석이었으니, 조금씩이나마 일당독점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를 읽을 수 있다.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정읍시의 유성엽 당선자는 18대에 무소속으로 등원한 현역의원으로서 성향 상으로는 민주당 계열에 속한다. 그러므로 일당독점 현상의 완화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주목할 대목은 남원·순창에서 통합진보당의 강동원 후보가 당선된 일이다. 특히 상대가 3선의 현역의원인 이강래 후보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사건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 속하는 순창군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오은미 후보가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진보계열 후보를 당선시킨 지역으로는 전라북도의

회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순창군에서 오히려 강동원 후보가 뒤지고도 남원시에서 더 큰 차이로 앞선 덕분에 당선되었다. 그러므로 강동원 후보의 당선을 그대로 통합진보당의 당선이라고 연결시키면 무리다. 가장 큰 요인은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출마한 무소속 임근상 후보가 강동원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동원 후보의 평판이나 역량 그리고 이강래 의원의 12년 업적에 대한 실망감 같은 개인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이 틀림없다. 이 두 가지 요인을 감안한 다음에 들 수 있는 요인은 일당독점 현상에 대해 전라북도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불만 그리고 이 틈새를 비집고 통합진보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위상을 조금씩 강화하고 있는 흐름이다.

한편, 당선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주 완산읍에서는 새누리당의 정운천 후보가 상당히 위협적인 활약을 펼쳤다. 여기서는 민주통합 이상직 47%, 새누리 정운천 36%, 통합진보 이광철 17%의 득표율이 나타났다. 광주의 이정현 후보와 더불어 전주에서 정운천 후보가 당선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전국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 역시 호남의 일당독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하며, 아울러 새누리당도 대안 세력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추세 자체는 결코 확연하지 않다. <표 1>은 2004년 17대 총선, 2008년 18대 총선, 2012년 19대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에다가 2010년 지방선거의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과 도지사 선거 득표율을 정리해 본 것이다. 정당의 이름과 구성이 이 사이에도 변화무쌍했기 때문에, 일단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통합진보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을 각각 하나의 세력이라고 보고 득표율을 비교해 봤다. 괄호 안에는 현재의 구도를 준거로 삼고서 과거에 존재했던 다양한 군소정당들을 임의로 합산해 봤다.

이 표만을 볼 때에는 어떤 추세도 꺾을 만큼 드러나지는 않는다. 굳이 찾자면, 17대와 19대를 비교할 때,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이 80% 이상 얻었던 지지도가

민주통합당과 정통민주당을 합해도 66%로 내려 갔다는 점, 그리고 민주노동당-진보신당-통합진보당 등의 지지도가 약간 상승했고, 한나라당-새누리당이 거의 무의미하던 지위에서 10%를 넘나드는 수준으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을 말할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17대 총선은 탄핵역풍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면, 2008년 이후에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념적인 정향의 분포가 거의 비슷한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다.

[표 1] 각 선거별 정당 득표율

	17대 총선 (비례대표)	18대 총선 (비례대표)	6·2지방선거 (광역비례)	6·2지방선거 (도지사)	19대 총선 (비례대표)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67.26% (80.84%)*	64.30%	61.70% (63.72%)*	68.67%	65.57% (66.07)*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11.15% (11.90%)**	7.42% (10.34%)	14.82% (23.61%)**	10.58%	15.68% (16.67%)**
한나라당/ 새누리당	3.41% (6.07%***)	9.25% (18.20%***)	12.63%	18.20%	9.64% (15.40%***)

* 새천년민주당(17대); 평화민주당(6·2 지방선거); 정통민주당(19대) 포함

** 녹색사민당, 사회당(17대); 창조한국당(18대); 국민참여당, 사회당(6·2 지방선거); 창조한국당, 녹색당, 청년당(19대) 포함.

*** 자민련, 통합21, 공화당, 기독교(17대);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기독교(18대); 자유선진당, 국민생각, 친박연합, 기독교, 한국기독교당, 한나라당(19대) 포함.

2. 정당정치에의 반응성(responsiveness) 강화

전라북도의 유권자 사이에서는 일당독점 현상에 대해 광범위한 불만이 존재한다. 이번에 통합진보당 후보 한 명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이변”이 초래된 데에, 이러한 불만이 결정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배경적인 요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최근 8년 동안의 정당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추세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뚜렷하지 않은 수준의 기미는 찾아볼 수 있다. 위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간 수치를 보자. 민주당보다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정당들이 2010년 지방선거 광역비례 정당투표에서 얻은 지지율을 단순합산하면 23.61%에 달했다. 이것이 19대 총선에서는 16.67%로 줄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득표율 합계는 15.68%로, 2008년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얻은 득표율 합계보다 1%p 미만이지만 증가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때로는 진보정당 지지로 이어지지만 때로는 민주당 내부에서 소화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주당 소속 당선자 9명 가운데 초선이 6명이다. 이 6개 지역구 중 세 곳에서는 18대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지역구를 옮겼고, 나머지 세 곳에서는 공천과정에서 물갈이가 이뤄졌다. 군산과 전주 완산갑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도 참가하지 못했고, 익산에서는 현역 여성위원을 신인 여성후보가 경선에서 꺾었다. 군산의 강봉균 의원은 결과를 승복하는 데 며칠 걸렸고, 완산을의 신건 의원과 익산을의 조배숙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패배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이른바 “호남 민주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변화가 자체로 바람직했는지는 물론 이렇게 교체된 6명의 신인들이 어떤 활동을 펼칠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호남에서 민주당이 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기성 의원들의 대폭 교체만으로도 정당이 여론에 어느 정도는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2010년 지방선거 광역비례 정당투표에서 23% 이상으로 나타났던 진보성향의 지지표가 이번에 17%에 미달한 것은, 민주당 내부의 이와 같은 변화가 이들의 표를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사표 방지심리, 즉 준봉투표(conformist voting)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 호남에서 민주당에 불만을 가지는 유권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변화노력에 다시 점수를 준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유하면 이명박 정권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박근혜의 변화노력에 다시 매력을 느끼는 현상과 비슷하다. 이것은 주관적으로만 보면 “될 사람 짝어주자”는 심사지만,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긴 줄에 붙자”는 준봉주의일 뿐이다. 정당이나 후보 사이의 정책 차이를 분별해 보려는 시도 자체를 기울여보지 않고, “그 놈이 그 놈”이라는 몰타기식 언론보도에 편승해서, 주권적 의사표현의 의무 가운데 일부를 방기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민주통합당의 결핍과 관련해서 좀 더 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3. 민주통합당의 결핍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인으로 “공천 실패”를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전혀 분석적인 내용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을 가지고 공천 실패라고 일컫는다면, 이는 단순히 선거에서 졌다는 사실을 반복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원인을 지적하려면 공천 과정의 어떤 대목이 어떤 유권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실망을 안겼는지를 특정하려는 방향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가 끝난 후에 항간에 무성한 소리들은 전혀 이런 방향이 아니므로, 깊게 새겨들어 무슨 대책으로 연결할 만한 내용이 없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천을 실시하고자 노력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1차 분류작업을 담당했고,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된 지역에서는 절차에 따른 예비선거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이뤄질 때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들먹이면서 아주 강하게 저주의 언사를 퍼부었다. 이런 목소리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데서 나오는 원시적인 불만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들의 불만이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적 인물”, “도덕성”, “경제민

주화”, “한미 FTA 폐기”, “지역과 함께 했던 사람”, 등이 배제되고 “구태정치인”, “흠집 투성이”, “모피야”, “타협론자”, “낙하산” 등이 공천되었다는 불만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일정한 가치나 명분이나 이념이나 정책을 표방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들 각자의 주장들은 모두 단일주제정치(single interest politics)의 형태로서, 정당정치를 구성하는 일차적인 재료는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요구들 사이에 논리적 선후관계와 실천적 우선순위를 정리해내는 기능이 없다면 하나의 정당으로서 존립 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곧 집단적 의사결정의 문제이고, 민주적 리더십의 문제이며,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세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의 관심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얼기설기 걸려서 연결된 엉성한 구조물이다. 봉건-일제-독재 시대를 거쳐 오면서 형성된 민주적인 근대 민족국가의 이념, 성장주의에 반대하는 복지와 균형의 경제정책, 그리고 국가관료 조직의 지부들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미묘하게 결합한 호남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세 갈래의 차원들이 민주당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 주변에 무수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다.

첫째 차원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한 국가권력의 정상화라고 하는 과제를 얼마나 중시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중시한다면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은 무엇인지가 문제이다. 둘째 차원에서는 양극화의 해소방안, 재벌 개혁의 범위와 속도, 그리고 당장 한미 FTA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문제이다. 셋째 차원에서는 호남이라는 지지 기반을 포기할 수도 없지만, 호남의 기득권 구조를 스스로 타파하지 못하면 개혁성도 퇴색하고 지역당 이미지도 탈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차원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정책과 노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자칭 타칭 “지도자 급”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국지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서는 의견들을 내놓지만 종합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 중요하게는 개별적으로 돌출하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나의 당론을 형

성할 수 있는 조직적 질서 자체가 없다. 이 때문에 당내의 논란이 그대로 외부로 노출되고, 당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에 대한 이견이 곧바로 공개되면서 “내홍”이라든지 “리더십 부족”이라는 상투어에 실려서 당 자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언론과 박근혜는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써 선거판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결론

민주통합당은 하나의 정당으로서 조직의 민주화를 이룩하지 못함으로써 한국 사회 수구 기득권을 대신할 수 있는 수권 세력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당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장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산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정국에서도 만년 야당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과제를 풀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김대중 시대의 보스형 리더십과 다른 한편으로 노무현 시대의 중구난방 상태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매우 좁다란 길을 찾아낼 수 있어야 이 과제를 풀어낼 수 있다. 당의 안팎에서 떠들어대는 비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걸리지 않는 말아야 한다. 언론/관료제/법조계/학계/군부/재벌 등등, 강고한 기득권 연대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리한 정치 환경을 가능한 한 널리 알려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린다는 인상도 주지 말아야 한다. 선거 민주주의에서 모든 결정이 따지고 보면 나눠먹기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계몽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식 나눠먹기보다는 민주당식 나눠먹기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오천년 동안 획일적 공동체의 모델이 구성원의 의식을 지배해왔다. 해방 후 “민주주의”가 구호 수준에서는 이상인 것처럼 운위되어왔지만, 다양성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통합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민족 단위에서 풀어야 할 숙제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상명하복식 군주정의 모델에 집착하고 있으며, 30% 이상의 유권자들에게는 이 모델에 입각한 담론이 호소력을 가진다. 다원적 민주주의의 형체를 민주통합당이 짧게는 8개월, 길어도 몇 년 안에 구성해내지 못한다면, 민주통합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무망할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도 그만큼 요원해질 것이다. ∞